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정보화 분야 -

- 2006년 3월 28일(화) 14:00 ~16:00
- 기획예산처 MPB Hall (청사 별관 2층)

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정보화 분야 작업반

동 자료는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보화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13:30 ~ 14:00

등록 및 네트워킹

14:00 ~ 16:00

SW 개발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가?

사 회 : 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 표 : 백영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정책연구센터 팀장)

쟁점토론1 : 효과적인 SW정책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쟁점토론2 : IT서비스시장 왜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쟁점토론3 : SW 및 IT서비스 가격 산정방식

토 론 : 강재화 (공공기관발주자협의회 회장)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준성 (삼성 SDS 전무)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이장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한혁수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형태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국장)

황종성 (한국전산원 IT전략지원단 단장)

목 차

제1부 정보화분야 재정운용계획 및 투자방향

I. 그 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3
1. 현 황	3
2. 재정투자 추이	5
3. 성과평가	6
II.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	12
1. 정책방향	12
2. 재정투자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14
3. 정보화분야의 5년 후 미래상	17
III. 부문별 투자방향	20
1. IT 기반확충	20
2. 산업정보화 강화	21
3. 행정서비스 정보화의 지속 추진	22
4. 국민생활 정보화	24
5. 정보화의 역기능 완화	25

제2부 SW 개발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가?

I. 정보화 재정운용과 SW산업	31
1. 정보화 성공의 요건	31
2. 국내 SW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33
3. SW산업과 재정의 역할	34
 II. 토론쟁점	36
1. 효과적인 SW정책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36
2. IT 서비스시장 왜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37
3. SW 및 IT서비스 가격 산정방식	37」
 【첨 부】 정보화 분야 작업반원	38

제1부

정보화 분야

재정운용계획 및 투자방향

I. 그 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1. 현 황

- '90년대 중반부터 국가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정보화 수준은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음.
-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세계 1위, 인터넷 이용률 세계 7위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인구 100명당, '05년 6월 기준) : 한국 25.5, 네덜란드 22.5, 덴마크 21.8, 일본 16.4, 미국 14.5
 - 인터넷 이용자수(인구 100명당, '04년말 기준) : 뉴질랜드 81.95, 아이슬란드 77.00, 스웨덴 75.46, 몰타 75.46, 패로제도 66.47, 그린란드 66.32, 한국 65.68, 미국 62.28, 일본 58.69
-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조달정보화를 통한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전자입찰률 92.8%)
 - 주민·부동산·자동차·고용·통관 등 주요 행정정보DB 구축
 - 온라인상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안방민원시대 개막('02년 11월)
 - 관세정보화를 통한 수출입 통관절차의 단축 및 국세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전자거래 확산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사업 등을 통해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확립
 - 전자거래 규모는 '04년 약 300조원으로 전체 거래의 19.1%를 차지
 - IT산업의 전체 실질GDP 대비 비중은 '05년도에 15.1%이며, 수출 비중은 '05년도에 27.6%를 차지
- 전 국민의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및 정보이용시설 설치를 통해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
 -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를 포함하여 국민의 온라인 참여 및 거래가 활발

□ 그러나 전자정부 수준 및 정보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보화 성숙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제 정보화 지수 순위 요약>

[작성기관] 지수명	우리나라 순위 (조사대상국가수)	최근 발표일	상위국
[IDC/World Times] 정보사회지수	10 (53)	2005. 11	덴마크, 스웨덴, 미국
[EIU] e-비즈니스준비도지수	18 (64)	2005. 4	덴마크, 미국, 스위스
[UN] 전자정부준비지수	5 (191)	2005. 12	싱가포르, 미국, 영국
[UN] 온라인참여지수	5 (191)	2005. 12	영국, 미국, 싱가포르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지수	3 (50)	2005. 8	스웨덴, 미국

2. 재정투자 추이

- 통신·방송·인터넷이 대통합되고 인간·사물·컴퓨터가 융합되는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BcN, IPv6, USN)의 구축 및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연계·통합·기반구축·운영, 그리고 정보자원공동활용 등의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투자
- 정보화 투자규모는 '01년까지 급증한 이후, 감소 혹은 정체 추세임.
 - '99~'01년 동안 연평균 28%이상 증가하였으나, 정보화공공근로, 1단계 전자정부초고속통신망구축 등 대규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02년에 규모가 대폭 축소된 후, '0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3%대의 완만한 상승
 - 정보화 투자규모 : 1.5조 ('98년) → 3.1조 ('01년) → 2.8조 ('02년) → 3.2조원 ('06년)
 - 국가 통합재정규모 대비 정보화예산의 비중 역시 '01년도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
 - 정보화 예산비중 : 1.4% ('99년) → 2.3% ('01년) → 1.5% ('04년)

<정보화 투자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조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계(A=a+b)	16,623	19,208	31,162	27,949	27,793	28,445	29,052	31,508
(증가율, %)	(10.1)	(15.6)	(62.2)	(△10.3)	(△0.6)	(2.3)	(2.1)	(8.5)
예산(a)	8,562	12,155	15,029	16,114	16,380	16,947	20,272	21,645
기금(b)	8,061	7,053	16,133	11,835	11,413	11,498	8,786	9,863
통합재정규모(B)	121	129.3	136.8	136	150.5	182.4	-	-
(A/B, %)	(1.4)	(1.5)	(2.3)	(2.1)	(1.8)	(1.5)	-	-

자료: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3. 성과평가

가. 정보화 투자의 성과

□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구축과 아울러 디지털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산업육성에 집중 투자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IT산업의 발전 및 정보화 확산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음.

- 1,400여 읍·면·동까지 전국 초고속국가망 구축·보급완료

□ IT R&D 투자와 전통산업에의 정보화 지원을 통해서 IT산업은 국가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부상

- IT산업 수출액 및 비중은 매년 확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 컴퓨터 등은 세계 1등 수출 상품으로 부상
- IT산업의 고용창출 규모도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

<IT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생 산	IT산업(조원)	115.0	145.3	150.3	189.1	209.0	226.0	231.1
	(GDP비중, %)	(11.2)	(13.1)	(12.9)	(11.1)	(12.3)	(14.2)	(15.1)
수 출	IT수출(억달러)	400	512	384	464	576	747	780
	(비중, %)	(27.8)	(29.7)	(25.6)	(28.5)	(29.6)	(29.4)	(27.6)

자료: 정보통신부.

□ 전자정부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는 등 정부혁신을 가속화함.

-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 완료('02년 10월) 등으로 전자정부 기반완성
 - UN('05년)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을 세계 191개국 중 5위로 평가 ('04년 5위, '03년 13위, '02년 15위)
 - UN('05년)의 전자정부 발전 5단계 중 4단계인 전자거래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처리를 통하여 대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불어 행정비용을 절감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등 414종 민원신청의 온라인화 및 4,000여종 민원안내의 인터넷 처리가 가능함.
 - 1회의 전입신고로 차량, 보건복지 등 주민과 관련된 10개 부문 주소 일괄변경
 - 일부 세금, 사회보험, 범칙금 등의 인터넷 고지·납부 가능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등의 공통 업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온라인 정보화를 추진
 - 전자결재는 '02년부터 전체 결재의 90%이상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관간 문서유통은 '04년부터 90%이상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유통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률 추이>

	'01.5	'02.12	'03.12	'04.6	'04.12	'05.12
전자결재율	66.8%	92.6%	93.8%	95.7%	96.9%	97.9%
전자문서유통률	52.1%	82.3%	88.9%	93.9%	97.4%	96.7%

자료: 행정자치부, 2006.3

- 새롭게 구축되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 시범 운영성공(교육인적자원부, '05년 12월)
 - 모든 학교에 전면 적용하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 중 교무·학사, 입학·진학 등 새로운 시스템이 성공적 시범운영을 마침.
 - 시범학교의 경우 시스템 사용방법 및 업무적 편리성에서 교원의 80%이상, 업무경감 기대에서 85%이상이 긍정적인 평가
 - '06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 전면 시행될 경우, 문서감축만으로도 연간 약 6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전망
-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아울러 인터넷 보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 24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침해사고 예·경보, 복구기술 지원 등을 전담할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개소('03년 12월)
 - 사이버공격 근원지의 국가순위가 '02년 2위에서 '04년 9위로 개선(미국 시만텍 인터넷 보안위협 보고서)
 - 스팸메일 1인당 수신량 감소('03년 12월 28.8통/일 → '05년 6.9통/일)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이용시설 설치, 정보통신기기 보급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환경 조성에 기여
 -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비 지원, KT에 초고속망 구축 의무부여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을 97%로 확대
 - 읍·면·동사무소 등에 무료정보이용시설(8,323개소) 구축을 지원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 지역(99.7%)에 정보이용시설설치
 - 저소득층자녀 7만명에 대한 PC 보급 및 통신비 지원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에 중고 PC 85,770대 보급

나. 정보화 투자의 문제점

- 범정부차원의 정보화 비전과 전략에 의거하여 정보화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된 정보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정부 부처별·단위업무별로 정보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기에 시스템간의 연계와 정보공동이용이 미흡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 전자정부안에서 부처의 벽을 넘어 정보가 횡적으로 통합되고 자료가 종적으로 정리되도록 정보공동이용방안이 마련될 필요
 - 실질적인 서비스혁신 수행주체이고 국가정책입안의 원천정보 핵심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미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필요
 - 정보화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간 연계 고려가 미흡
 - 다부처가 연계되고 표준화를 전제로 시스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하는 로드맵 과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제간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려가 미흡
 - 로드맵 과제간 연관부문에 대한 선후관계의 설정 등을 통한 사업추진 우선순위 결정없이 일괄적인 사업 추진
 - 로드맵 과제간 상호연계를 위한 표준화 병행 추진 미흡

- 정부 발주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시 SW 개발비에 대한 원가산정방식의 객관화, 과학화 미흡
 - '05년부터 권고된 사업의 개발규모에 의한 기능점수방식의 채택율은 전체 정보화사업 중 60~70%에 불과
- 다수의 정보화 인프라 조성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역할에 주력할 필요
 - IT기술과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정부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여지는 대폭 축소
 -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비용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기술이 다원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장경쟁은 활성화 되어가는 추세
 - 정보서비스는 비즈니스 모델이 빠른 주기로 발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수요자로서 혹은 제도설계자로서 발전동력을 제공하는 수준만 가능
- 아울러 정부는 스스로 수요자로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 수행
 - 정부의 초기수요 창출역할은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실패위험성을 줄여 민간투자의 활성화 가능
 - 다만 정부가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정보화 인프라 및 서비스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시장의 조정자 기능 수행
- 개인과 기업의 정보활용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이 여가활동, 게임, 채팅 등 소비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기업의 인터넷 활용목적도 e-메일 및 정보검색 등 단순활용의 비중이 높음.

□ 개인정보침해 등의 정보화 역기능이 심화되고, 더불어 장애인·빈곤층 등 소외계층에서 정보격차문제가 지속

-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불법정보유통,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증가
- 인터넷 중독,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도 심화
-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따른 사회전반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정보격차는 여전히 존재
- 전체 가구와 장애인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간 컴퓨터 보유율 격차는 '05년말 기준 각각 12.7%p, 25.5%p로 여전히 존재

<정보화 역기능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연평균증가율
개인정보침해신고건수	17,956	21,585	23,036	18,206	0.5%
불건전정보 심의건수	32,221	79,134	69,292	119,148	54.6%
바이러스 피해건수	38,677	85,023	107,994	1,093	-69.5%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율 격차 추이>

(단위: %, %p)

구분	2002.12		2003.12		2004.12		2005.12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 전체국민	78.5	-	77.9	-	77.8	-	78.9	-
▪ 장애인	56.4	22.1	57.9	20.0	62.3	15.5	66.2	12.7
▪ 저소득층	33.4	45.1	46.7	31.2	49.9	27.9	53.4	25.5

자료: KADO, 2002~2005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NIDA, 2001~2005 정보화 실태 조사.

Ⅱ.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

1. 정책방향

- ☐ 정부 및 국가사회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능기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정보화 및 정보산업기반의 조성
 - 내실화, 혁신주도, 파급효과가 큰 정보화사업을 먼저 수행하는 전략적 정보화 추진으로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
 - 정보통신기술이 정부 및 사회전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의 질적 심화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산업 및 국민생활 등 전면적 정보화 추진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 추진
- ☐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 및 대민서비스의 강화
 - 업무처리시간 단축, 구비서류 감축, 행정 및 사회적 비용절감 등 실질적인 정보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
- ☐ 50~100M급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통한 다양한 고속·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구축,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서비스와 기술개발에 대한 선행 투자 확대
- ☐ IT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정보화 효용극대화
 - 정보화가 선진한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요촉진(활용) 전략으로서 정보화를 동시 추진

- 산업정보화를 Value Chain 관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

□ 정보화 역기능의 방지 및 공평한 정보접근권을 보장

- 정보격차, 사이버공격, 개인정보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 공평한 정보접근권의 보장 및 신뢰받는 사이버공간을 건설

<정보화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정투자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정부 및 국가사회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능기반사회의 실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및 IT기반 확충
 -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투자
 - 핵심기술 개발 및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 신뢰받는 사이버공간 건설,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및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
-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자원관리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열린 전자정부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전자정부의 구현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체화됨으로써 구체적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기관 간 수평적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성과 및 고객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행정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
 - 정보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서 정부 정보화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
 -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 및 전자투표를 실시
 - 복지, 교육, 건강, 재난 등 서비스 분야별 전문포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합한 정부대표포털을 구축
 - 범정부 차원의 행정·민원서비스와 공간정보의 연계성을 강화

-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위해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정부의 모든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
 - 국가의 주요기록물, 정책정보, 통계정보, 각종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콘텐츠를 확충하고 이를 정책수립 및 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보급·확산을 통해 범정부적인 정보기술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정보화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
 - 정보화 사업 추진 상의 전략적·체계적 기술관리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여 정보기술 투자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통·방 융합, 고속·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IT 첨단인프라와 관련한 핵심기술 개발 및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 IT839 관련 새로운 개발기술에 대해서 국·내외 종합적인 시험의장을 제공하여, 동북아 지역의 IT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IT839 통합 test-bed 구축
- IT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선진국에의 기술종속 및 막대한 로열티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하여 IT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 지원
- 범정부적 노동·교육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산업현장수요를 고려한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체계를 확립

□ IT 신성장동력의 창출기반을 조성

- 그 동안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엔진 역할을 해 온 IT산업이 지능기반사회의 차세대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

-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홈 네트워크,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임베디드 S/W, 디지털 콘텐츠,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
 - IT839 등 각종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보급으로 관련 수요창출 및 산업육성, 국민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
 - IT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성장 유망한 IT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IT 중소기업 M&A 활성화,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간 협업촉진 등을 통해 2007년까지 IT 중소기업의 생산 110조원과 수출 310억 달러를 달성
-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선도사업 중 특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분을 중점 지원
- 홍수, 가뭄, 태풍,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발에 대응하여 u-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관리부문의 혁신
 - 농축수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의 구축 등 농축수산부문을 혁신
 - 생명존중 및 지속 가능한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RFID를 이용한 환경관리 및 폐기물 관리 등 환경부문을 혁신
- 전 국민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환경을 보장하고 정보활용을 극대화하여 디지털 복지사회의 구현 및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버공간을 건설하기 위한 정보윤리 기반사회 토양을 조성
- IT 활용교육의 내실화, 범국가적 e-Learning 기반의 구축을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17.5%)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35.6%)으로 제고

- 정보윤리 기반사회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성 및 신뢰성의 보장하며, 경쟁력 있는 IT 인적자원의 확충, 그리고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지능기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술의 발전 및 융합에 대응하는 법제도 기반 조성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구축, 유·무선 통합형 전자서명 인증체계 구축 및 차세대 표준암호 개발, 음란·스팸메일 차단 S/W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건전한 정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단말기 보급 및 대여, 정보통신 기반환경조성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보편성 확보

3. 정보화분야의 5년 후 미래상

- 열린 전자정부와 IT839 전략 실현을 통하여 국가시스템을 혁신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10년 전자정부는 전자정부지수(UN) 4위 이내, 정보사회지수(IDC) 5위 이내, 민원업무 온라인화 85%이상 목표
 - '09년까지 전체 산업에서 IT산업 비중 20% 이상 확대
- u-Korea 구축단계('06년~'10년)
 - BcN, USN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유비쿼터스 사회기반 구축
 - 초고속 통·방 융합 네트워크, 사물간 센서 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 및 유비쿼터스 IT의 인프라 조성

- IT, BT, NT 간의 융합기술 등 차세대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에 주력
 -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 및 관련 유비쿼터스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유무선의 광대역 네트워크에 연결된 휴대단말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u-유통, u-물류, u-Healthcare 등 사회 전반에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발굴되어 보급
- 대부분의 행정정보가 온라인으로 공유되고, 대부분의 민원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진입
- 정부의 모든 정보자원이 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됨에 따라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
 - 국민은 인터넷, 전화, 휴대폰, PDA,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서비스를 이용
 - 통합형사사법체계의 구축으로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형사사법관련 민원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
- IT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국민소득 2만2천불 달성을 유도하여 경제선진국에 진입
- 참여정부 내('07년까지) IT산업의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불을 달성하고, '09년까지 이를 450조원과 1,300억불로 확대
 -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이를 통한 국가 사회전반의 정보화 촉진으로 IT신산업의 수요 및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등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

-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완성을 위해 정부재원을 선도투자 (seed money)로 활용, 초고속정보통신 수요 및 민간투자 유도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정부 1조2천억원, 민간 8천억원 투자)

□ 국가 전 분야에 대한 지능화를 통해서 세계 수준의 생산성 창출과 디지털 복지사회를 실현

- RFID/USN, ITS 등을 활용하여 생산공정에서 소비자까지 모든 과정을 제어·관리하여 국가 유통물류 구조가 혁신된 사회실현
- 도서관, 박물관, 우체국 등 공공시설의 정보화를 통해 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고 이용 편의를 제고
- 전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유발시킴
- 홈 네트워크를 통한 가정기기 원격제어, 가스 및 전기 등 원격검침, 재택근무 등이 가능
- 센서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및 위급 시 원격진료 서비스, 생활지원용 로봇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 분야의 비전과 전략 >



Ⅲ. 부문별 투자방향

1. IT 기반확충

- 원칙적으로 IT 기반확충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을 정비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자발적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 아울러 정부는 스스로 수요자로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 수행
 - 정부의 초기수요 창출역할은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실패위험성을 줄여 민간투자의 활성화 가능
- 중장기적 관점에서 IT 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
 -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와 인프라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을 지원
 - 해외 우수기업의 R&D 센터 유치노력을 강화
 - 시장에서의 공급유인이 부족한 기초기술에 초점을 맞추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선별적 접근 필요
- 전략적 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내개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등에서 국내기술의 글로벌표준 반영을 확대하고 아시아 표준주도를 위한 한중일 표준화 협력 강화

- IT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인프라 관련 재정지출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의 활용, 사업자에 대한 과금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
 - 사전적 실패위험이 높아 민간투자가 과도하게 지체되는 경우 정부가 우선 투자할 수 있으나 향후 해당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투자비 회수 방안을 모색
 - 기술 및 서비스 발전의 초기단계를 벗어나 사전적 위험의 정도가 가시화되고, 과금이 가능한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 산업정보화 강화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의한 시장지향적인 산업정보화를 촉진
 - 산업정보시스템 원천기술의 개발, 보급을 통한 산업정보화 지원
 - 정부는 산업정보화의 근간인 SW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공개SW의 적극적인 도입을 지원
 - 시장 수급과 경쟁에 의한 정보화 관련 상품의 개발, 판매로써 시장지향적인 발전을 도모
- 산업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SW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
 -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시장 제공
 -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 발주 시 특정제품 및 기술 Spec요구로 인한 공정 환경 저해 요소를 모니터링 · 감독

- SW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하도급실태를 시정하여 중소 SW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국내 중소 우수 SW제품에 대한 공공부문 레퍼런스를 제공하여 이들 제품이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체시장의 20.8%를 차지하는 공공 SW시장에서의 납품실적은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신뢰 확보에 있어 핵심요소로 작용
- 발주 제도의 선진화를 가속화
 - Service로서의 SW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활성화하여 품질 및 성과에 의한 공공 구매체계 확립
 - 공공부문 발주자들의 발주관리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제도 및 조직을 신설하여 선진적인 발주관리 전문화 유도
 - 사업 예산절감이 주요평가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감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프로세스 감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행정서비스 정보화의 지속 추진

- '05년까지 추진된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06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과 프로세스 혁신 추진
 - '05년까지는 BPR/ISP, 공통기반 구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
 - '06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과 프로세스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성과 가시화 예정

< 전자정부 로드맵 단계별 추진계획 >

◆ 추진과제 선정 ◆ 세부계획 수립 ◆ 추진기반 조성	◆ BPR/ISP 추진 ◆ 공통기반 구축 ◆ 법·제도 정비	◆ 시스템 구축 ◆ 프로세스 개선 ◆ 서비스 개선	◆ 시스템 통합 ◆ 프로세스 혁신 ◆ 서비스 혁신	◆ 통합 서비스 ◆ 정부 혁신 ◆ 추진성과 평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준비/기반조성	기반구축	시스템 구축	통합/혁신	혁신/평가

□ 성과중심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 사업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로드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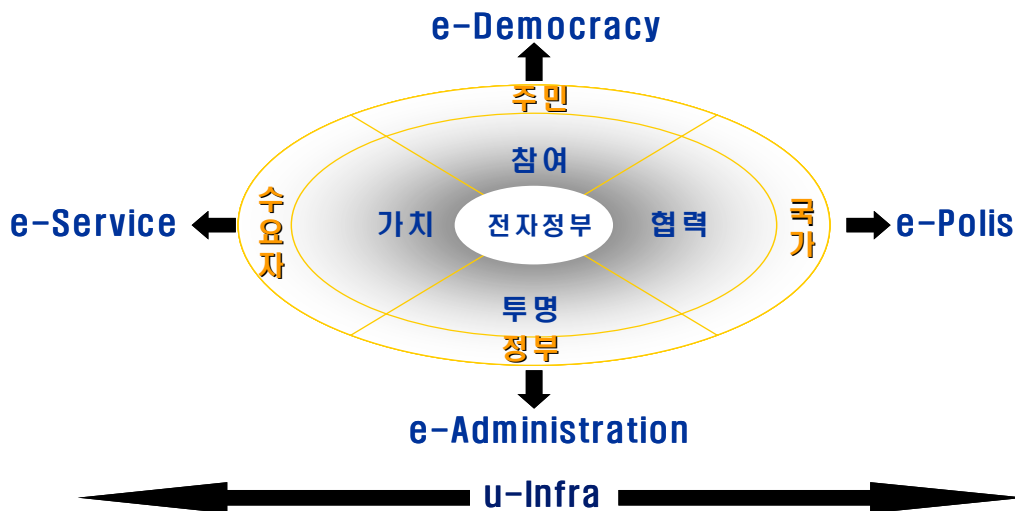
- 관계기관간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시행
- 전자정부사업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성 등을 강화하여 추진
- PMO 도입, 주요 관련사업에 대한 별도 TFT 구성 등을 통해 사업관리 전문성 및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 '06년부터 일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도 강화
- '06년 사업부터 사업 조기 추진 및 예산 적기 집행
 - 연내 집행을 완료토록 추진하여 국가예산을 효율적 운용 및 성과달성에도 기여

□ 차세대 전자정부를 위한 준비 착수

- 인구,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수립
 - 미래 전자정부는 “손에 잡히는 가치실현을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정부 실현(Value in hand, but invisible government)”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행정생산성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미래 전자정부 비전 수립방향 >



4. 국민생활 정보화

□ 국민들이 정보화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정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교통(ITS), 토지(GIS) 등 e-SOC분야는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고도화 및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데이터 정보기반을 확충

- GIS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활용성 확보방안을 마련

- 물류 선진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RFID를 이용한 유통·물류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지원

-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ITS, LBS 등을 활용한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을 지원

-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고 행정정보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 의료, 여성 등 사회분야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 진료정보 공동활용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자의료 서비스체계를 구축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쓰레기리사이클링시스템 및 지하수, 하천, 수질오염 자동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과학기술, 교육, 학술, 문화, 역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지속적 확충, 구축된 DB에 대한 이용도 제고 등을 추진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지도의 작성·관리를 통해 과학기술, 교육학술 등 전략적 순위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DB 구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기존에 구축된 기술을 기반으로 u-기술을 접목
 - '08년까지 2억 7천만건의 DB를 구축하고, 연간 1억 4천만건 이상의 접속 및 1천개 이상의 기관과 연계를 추진

5. 정보화의 역기능 완화

가. 정보격차해소 분야

- ☐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우선적 정책대상 집단으로 설정, 정보격차해소 정책 추진
 - 지식정보사회 기본적 권리 보장이란 차원에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보화 수준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기기 보급
 -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PC 보유율 제고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우수 보조기술 상품화 지원
- 정보이용시설의 확대 및 이용편의성 제고

□ 정보 활용격차 완화

- 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정보화교육 추진
 -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각 계층의 욕구에 적합한 정보활용모델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

□ 정책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총체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정보격차해소 사업평가 시스템 강화
 - 관련 사업들의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및 재원의 적극 활용

-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
 - 공공 및 민간기관의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 운용
- 민간기업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해 우선구매제도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참여 촉진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

- ☐ 사후적 개인정보보호에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프라이버시 보호로 확대
 - 개인정보호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의 사전적 보호와 연계된 정책 추진 필요
- ☐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교육활동을 강화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자율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 자율규제 도입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관 스스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 개인정보 침해 등 신뢰 상실이 발생할 때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
- ☐ 기술 기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제공, 관련 SW의 개발을 지원
 - 새로운 개인정보침해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PETs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제2부

토론주제 : SW 개발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가?

I. 정보화 재정운용과 SW산업

1. 정보화 성공의 요건

가. 정보화 프로젝트 성공의 요소

☐ IT전문가의 리더십

- 전산담당 공무원 수준의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라 정보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상위레벨의 IT전문가인 CIO(Chief Information Officer)가 필요

- CIO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 표준화된 발주관리 지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사업 기획 및 관리 유도

* 우리나라는 '98년 제1차 정보화회의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대통령 훈령 제 7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기획조정부서의 장을) 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정

☐ IT계획과 프레임, 그리고 Standard

- 비용의 적정성·사업성과를 적절하게 평가 할 수 있는 IT프로젝트를 위한 계획 또는 프레임이 필요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부처간·시스템간·기술간 연계 등 IT의 통합적인 관리기반으로써의 사전계획을 유도하여 프로젝트의 성공 달성

* 미국의 경우, '02년부터 정보공유와 상호운영성, IT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FEA(The Federal Architecture)를 본격적으로 개발 중

□ IT특성에 기초한 구매제도

- 서비스로써의 가치를 인정하는 IT특성에 기초한 구매제도 필요
 - 이를 위하여, SW가격에 의한 구매보다 성과기반 구매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전문성이 요구
 - * 미국의 경우 GWAC(The Government-wide Acquisition Contract)나 PBSC (Performance-Based Service Contracting)을 통해 IT특성에 기초한 구매 프로세스 시행
 - * 성과기반 서비스 계약인 PBSC는 원하는 성과나 결과를 먼저 결정하고 기업이 이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정해서 제시하는 계약

나. 정보화의 성과평가

- 정보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성공, 업무효율성, 사용자 만족도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그러나 효율적인 정보화 재정투자를 위한 방안으로 정보화 투자에 대한 2차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와 IT산업발전의 상호연계성이 낮아 정보화투자의 SW산업에 대한 2차적 파급효과는 미비
 - 국내 SW제품 중 시스템 SW의 공공시장 점유율은 DBMS가 0%, 서버 OS가 7%, PC OS가 0.1% 정도로 미흡한 실정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수주율이 각각 52%, 48%로 계약 건수를 감안 할 경우 중소기업의 수주율이 낮은 상황

2. 국내 SW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가. SW시장의 구조적인 측면

□ 국내 SW시장의 특정제품에 대한 고착화(lock-ins) 현상이 있고, 공공부문의 특정 패키지SW 제품의존도가 매우 높음.

○ 특히, PC OS, DBMS 등 시스템 SW분야에 있어 특정 Vendor 또는 제품이 독과점적으로 도입

○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개SW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

* 공개SW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 공개SW인 리눅스의 세계 서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임('03 : 23.9% → '07 : 32.3%).

□ 국내 IT Service 시장의 진입장벽

○ 국내 IT Service 시장은 그룹 관계사를 수요대상으로 하는 내부 거래시장(Captive Market)의 비중이 높고,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과 같이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에 단순히 작업을 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보임.

나. 정부 발주 프로세스의 문제

□ 정부는 '05년부터 인건비 위주의 투입물 위주의 방식에서 기능점수(FP : Function Point) 방식을 준용토록 권고함.

○ 하지만, 실제로는 기능점수 방식에 대한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체 정보화사업 중 60~70%만이 기능점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SW사업 발주 프로세스에 대한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

-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경우, 발주 담당자의 기술전문지식 부족, 발주기관의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주자가 복잡한 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움.
- 발주관리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은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미흡으로 이어져 결국 정보화사업의 완성도 및 성과를 저조하게 하는 원인

□ SW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관행

- 공공기관의 SW구매는 조달청을 통한 구매와 정부기관의 직접발주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SW의 기술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
- 계약 체결 및 사업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적정한 보상은 미흡
 -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 투입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현상

3. SW산업과 재정의 역할

가. 공정경쟁 시장의 여건조성

- 공공 정보화 사업 발주 시 특정제품 및 기술 Spec요구로 인한 공정 환경 저해 요소를 모니터링·감독하여 SW발전 및 성장잠재력 상승 유도
- SW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완화시켜 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

나. 중소 우수SW 제품 시장 제공

- 국내 중소 우수 SW제품에 대한 공공부문 레퍼런스를 제공하여 이들 제품이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개SW 구매확대를 통한 예산절감과 SW산업 활성화 도모

다. 선진 발주 제도의 선구자로서의 역할

- Service로서의 SW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활성화하여 품질 및 성과에 의한 공공 구매체계 확립
- 예산 비용절감에 따른 과업변경이 SW업체에게 전가되는 실태를 시정하여 건전한 SW산업생태계 토양 조성

II. 토론주제 : SW 개발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가?

- SW시장에서 재정의 역할

<쟁점 1> 효과적 SW정책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 장기적인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방향의 명확한 타겟 설정 필요
 - Catch-up 전략을 구사했던 한국경제는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글로벌 리더전략으로 전환시키는 노력들이 필요
- 하지만, 국내 SW시장의 왜곡적인 측면, 즉, SW산업 발전 저해 요인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SW시장 왜곡 측면으로는, 특정제품에 대한 고착화 현상(lock-in effect), 대기업 중심의 내부거래로 인한 진입장벽 발생 등이 존재
 - 이에,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효율성을 증대 및 플랫폼 중립성 확보가 필요
 - * 미국은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과 협의하여 매년 기관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제를 도입하여 시행('04년 : 23%)
 - * 일본의 경우, 매년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계약 목표비율제를 도입하여 시행('04년 : 총관수의 46.5%)

<쟁점 2> IT 서비스시장 왜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지식정보사회에서 SW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SW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됨.
- 국내 SW산업이 그룹 계열사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른 내부거래 시장(Captive Market)의 형성 및 고착화,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
 - 발주자의 기술전문지식, 정보화사업 발굴 및 업무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발주시 전 프로세스에서 특정 기업(SI업체)에 대한 의존성 증대
- 이러한 시장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 그동안 시장상황에 대해 재정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시장왜곡 현상 해소를 위한 제도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함.

<쟁점 3> SW 및 IT서비스 가격 산정방식

- SW산업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산업으로서 기존의 제조업과는 다른 생산방식과 유통방식을 가지고 있음.
 - SW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고, 발주자의 SW 원가산정방식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SW에 대한 적정가격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시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예산편성시 SW에 대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결국 사업수행시 원가보다 낮은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SW사업의 부실화 및 시장왜곡을 야기하는 한 원인

정보화 분야 작업반

건국대학교	권남훈(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이봉호(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인석(교수)
국토연구원	사공호상(연구위원)
전자통신연구원	임명환(그룹장)
교육학술정보원	이용효(센터장)
정보문화진흥원	최두진(센터장)
정보보호진흥원	정연수(단장)
한국전산원	황종성(단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백영란(팀장)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
	SW진흥팀장
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장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연구위원)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산업정보재정과장